

제47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즈음한 선도농가의 건의 및 결의문

〈올해도 개방화의 높은 파고는 우리 민초들의 머리위에서 가장 힘없는 농민들의 숨통을 끊을 기회를 노리고 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관련한 협상이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으며, 이어 속속 들려오는 한·EU 자유무역협정, 한·중 자유무역협정 관련 소식은 아예 우리 농업과 농촌을 포기하겠다는 정부의 대 농민전쟁 선포나 다름없는 것 같다.

오늘날 농정의 최우선 목표는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에 역점을 두고 도농 격차가 없는 농가소득과 농민생활 수준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농민들의 소박하고 간절한 소망은 지금처럼 선조가 물려준 논밭에서 열심히 농사 지으며 가족,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 힘없는 농민들에게는 과분한 욕심이라고 구조조정과 경쟁력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를 하루빨리 정든 고향땅에서 몰아내어 도시의 최빈민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위정자들이 말하는 선진복지국가 정책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인구증가를 전제로 하여 농정가들이 줄곧 시행해 왔던 생산성향상을 통해 농업소득을 올리려는 성장위주의 생산농업론은 이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농촌사회의 유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빨리 인식하기 바란다.

이제 농사를 짓는 농민과 농산물을 먹는 소비자 즉 〈사람〉을 농정의 중심에 놓고 이 생산자의 개별 속성을 명확히 하여 그들이 농촌에 남아 지속적으로 농업의 주체 즉 후계자로서 활동하게 할 수 있는 생활농업론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도 어린이와 어른, 여자와 남자, 학력과 직업, 소득의 고저, 농산물 품목별 선호도, 병의 유무, 가족구성에 대해 명확히 속성을 정리하고 분류해야만 올바른 도농상생의 먹거리 소비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 위주의 생활농업론 이야말로 인구 정체기 혹은 감소기에 기존 생산농업론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신농정의 대안으로써 농촌지역과 지역농업을 유지·활성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21세기 우리 선도농업인들은 개방화된 고도산업사회의 가장 지속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생활농업정책으로 전환하여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촌에서 농사지으며 인간답게 살



제47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 결의문 낭독



제47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 선도농가 강령선서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정부에게 요구한다.

첫째 :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과 지속가능한 생활농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국민 모두에게 참된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생활화해야 한다.

둘째 : 도·농간 소득, 교육, 문화, 정보, 의료복지 등의 격차가 없어야만 농업과 농촌이 유지될 수 있다. 앞으로 5년 후 국민 1인당 3만 달러 소득시대를 대비하여 농업, 농촌 활성화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 농업, 농촌의 중요성과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전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도시민들이 낸 세금이 직접지불제의 형태로 농가소득의 1/3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과감히 농업, 농촌에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농촌사회가 유지되도록 한다.

넷째 : 생활농업농가가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농민만이 농가나 마을단위에서 가공하여 도농교류를 통해 직거래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가공소득이 농가소득의 1/3 수준에 도달하도록 각종 규제 완화와 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구와 더불어 이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농심으로 무장한 우리 선도농가들은 상허 유석창 박사의 창립이념을 재조명하여 농민의 정신혁명을 통한 도농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하는 녹색교류와 농업의 기술혁명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고품질농업, 그리고 농촌의 생활혁명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가꾸기를 꾸준히 열심히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6년 12월 13일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선도농가 일동